

# “함께 극복합시다”... 서울은 ‘착한 임대인 운동’ 물결

시장부터 골목시장·남대문 등 지역 건물주 자발적으로 동참

임대료 인하에 상인 한숨 돌려 인사동 감사 마음 담아 현수막 착한 임대인에 세액공제 추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이 서울 곳곳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12일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착한 임대료 캠페인에 동참하는 건물주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금천구 골목상권에 파스한 훈풍이 불었다. 지역 건물주들이 소상공인을 돕는 임대료 인하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했기 때문이다. 금천구 독산동 ‘맛나는거리’ 상점가에서는 A건물주가 3개 점포의 임대료를 3개월 동안 매달 60만원씩, B건물주는 6개 점포의 한 달 임대료를 20~30만원 낮추기로 했다. 현대시장 내 건물주 2명도 총 3개 점포의 임대료를 2개월간 달마다 20만원씩 인하하며 착한 임대료 운동에 뛰어들었다.

금천구는 “서울시와 함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임대료를 깎아준 건



지난 11일 서울 인사동 거리에 인사동문화보존회가 내건 착한 임대료 감사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물주에게 임대 금액에 비례해 상가 건물 보수비와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대문구 천연동 영천시장에서는 가계 7곳의 점포주인 김운선 씨가 3월 임대료를 전액 받지 않기로 해서 화제가 됐다. 아울러 흥제3동 인왕시장 상가 임대 법인은 100여개 점포에 대해 3월부터 5월까지 임대료를 10%가량 깎아주기로 했다.

은평구 골목상권에도 착한 임대료 물결이 이어졌다. 대조시장 15여개 점포주들은 상반기 임대료를 10~2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연서시장은 올 1월 동

지내몰림방지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

인 중심으로 임대료 인하를 추진 중이다. 대림골목시장 일부 임대인들도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응암동의 한 건물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본인 소유 건물 내 3개 점포에 대해 3개월간 임대료를 10% 낮추기로 했다고 구에 알려졌다.

전용균 은평구전통시장 상인연합회장은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1월부터 자가 소유 점포 관리비를 면제해 왔고 임대료도 20% 인하할 것”이라며 전통시장 내 점포주들에게 착한 건물주 운동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동작구에서는 임대인 27명이 착한 임

대료 캠페인 참여 의사를 밝혀 52개 점포 임대인이 월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남성사계시장은 전체 140개 점포 중 32개 점포(23%)의 임대인이 월세 인하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구는 덧붙였다.

사당동에 상가 건물을 소유한 김모(75) 씨는 자신의 건물에 입점한 점포 4곳의 임대료를 2달간 30% 깎아주기로 했다. 김 씨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임대료 인하를 결정했다”며 “착한 임대료 운동에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동대문구 경동시장 임대인들은 3~5월 점포 임대료를 20% 할인해줄기로 했다. 임차인 점포 748곳이 3개월간 2억 7000여만원에 달하는 임대료 절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지난달 3일 중구 남대문시장 내 ‘C동 남대문중앙상가’의 고려인삼백화점 대표는 점포 50개의 임대료를 3개월간 20% 깎아주기로 했다. 동찬기업 대표도 임대료 20% 인하 운동에 함께하기로 하면서 남대문상가 E동, G동의 780여개 점포도 한시름 놓게 됐다.

인근 삼호우주상가대표와 남정빌딩 대표도 힘을 보태 삼호우주 주얼리 타운 550여개 점포와 남정빌딩 내 770여개 점포도 임대료 걱정을 덜게 됐다.

중구는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리고 자 남대문시장 상가 건물주들이 자발적

으로 2000여명의 상인들에게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20% 인하했다”며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부탁했다.

인사동문화보존회는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건물주의 임대료 인하 조치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현수막을 달았다. 플래카드에는 ‘건물주님 감사합니다! 착한 임대료!’, ‘착한 임대인 운동 지지합니다!’ 등의 문구가 적혔다.

착한 임대료 운동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 자치구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동작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할인해주는 건물주에게 정부의 세제 혜택과 별개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동대문구는 착한 임대료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역 내 주요거리 30여곳에 홍보 현수막을 걸고, 20개 전통시장과 한국외식업중앙회(동대문구지회), 동부교육발전협의회(동대문지회) 등에 임대료 인하 릴레이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는 안내문을 배부했다.

동대문구는 관계자는 “현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경영이 악화된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 중”이라며 “개정이 완료되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상반기(1월~6월)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코로나19로 알바 끊긴 청년에 수당 지급

서울시 월 50만원씩 2개월동안 1월20일~3월20일 실적 대상자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아르바이트나 일거리가 끊긴 청년들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청년 긴급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기존의 단기근로직(아르바이트·시간제·일용직)을 비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된 서울 거주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의 청년수당을 2개월간 지급한다. 단 1월 20일부터 3월 20일 사이에 실직한 경우에 한한다. 신청기간은 20일까지다. 지원

규모는 500명 내외로 선정 인원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청년 프리랜서 신속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 연기나 발주 취소 등으로 일거리가 중단된 프리랜서(디자이너, 강사, 작가 등)에게 최대 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비대면·온라인 방식의 창작 콘텐츠 개발이다. 오는 26일까지 공모 신청을 받는다. 대표자가 만 19~39세인 법인, 기업, 단체, 개인이 참여할 수 있다.

청년 소상공인이 납품하는 가정식도 시락을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도시락은 사람 간 접촉을 최소

화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전달된다.

시는 ‘청년 소상공인 긴급지원’을 통해 요식업계에 종사하는 청년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를 보완하고 복지관 임시 휴관으로 인한 취약계층 돌봄 공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일자리를 잃고 노동 안전망에서 이탈한 청년들이 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다양한 유형의 지원사업을 마련했다”며 “청년이 직접 기획한 긴급 지원 사업 시리즈를 통해 청년뿐 아니라 자영업자,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함께 경감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터미널 구석구석 꼼꼼 방역’ 광진구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육군지원팀이 12일 오후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을 방역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 ‘남산까지 쭉~’ 서울로7017-메트로타워 연결

20m 보행로, 엘리베이터 설치

서울시는 서울로7017과 인접한 대형 건물 메트로타워 사이에 20m 길이 공중 보행로를 만들어 연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새로운 공중 보행로는 서울로7017에서 메트로타워 3층으로 이어진다. 이 보행로를 지나면 힐튼호텔과 남산으로 갈 수도 있다. 메트로타워는 1층으로 이어지는 엘리베이터를 신설해 보행 약자의 접근성을 높였다.

앞서 서울역 임대 다른 민간 건물인 호텔마루, 대우재단빌딩도 서울로7017과 공중 보행로로 연결됐다. 시는 서울



서울로7017-메트로타워 간 연결통로. /서울시

스퀘어, 연세대 세브란스빌딩 측과도 보행로 설치할 협의 중이며 옛 서울역사 육상도 서울로7017과 연결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 재개발·재건축 부적격 정비업체 16곳 등록 취소

서울시 151곳 일제 점검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151곳을 일제 점검해 부적격 업체 16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행정처분 된 16개 업체는 소재지 불명 3곳, 자본금(5억원) 미달 2곳, 기술인력 부족 4곳, 주주지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 신고기간 지연 7곳 등으로 서울시 전체 등록업체의 10%에 해당한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으면 그 기간에 신규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나중에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적발되면 행정처분이 가중된다. 만약 등록이 취소되면 2년간 정비사업전문관리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시는 부적격 정비업체들이 조합에 대한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투명성 제고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처분에 불복하는 업체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시에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페이퍼 컴퍼니, 자격 미달 등 부적격 업체를 퇴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